

2023.06.02.(금)  
문화복지체육위원회실

## 조례(안) 등 검토보고서

### 《검토사항》

- 조례안 7건  
(제정4건, 개정3건)
- 민간위탁 동의안 4건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전문위원 염 대 석)

# 성남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 1. 제안경위

- 제 출 자: 박주윤 의원 등 13명
- 의안번호: 제5148호

## 2. 제안이유

- 최근 마약 관련사건 등으로 마약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청소년 및 시민들에게 마약류 위험성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제2조)
-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 예방계획 수립·시행 및 예방사업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제5조)
- 비밀준수의 의무, 협력체계 구축, 홍보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제8조)

## 4. 참고자료

- 관계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 「청소년보호법」 제5조
  - 기 타
    - 입법예고(2023. 05. 04. ~ 05. 11.): 특기할 사항 없음
- ※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 제8조

## 5. 집행기관 의견: 동의

## 6. 검토 의견

### 가. 조례 제정의 취지 및 이유

-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연령과 계층을 불문하고 마약과 관련된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범죄가 사회에 끼치는 피해를 알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남시민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 및 이유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 ◇ 5년 새 4배 급증한 마약범죄, 청소년들까지 '검은 손'... 법조계 “수사권 논란으로 비화돼선 안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테러'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는 마약판매 일당이 학생들에게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마약음료'를 무차별 배포하는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주었다.

이처럼 청소년 대상 마약 범죄는 날로 심각해지는 추세다. 대검찰청이 1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전체 마약사범 중 10~20대 비율은 34.2%로, 2017년 이후 2.4배 증가했다. 특히 10대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작년 481명으로 지난 5년 새 무려 4배나 급증했다.

출처 : 법조신문(<http://news.koreanbar.or.kr>)

#### ◇ 마약청정국? 이러다 공화국 된다.

한국이 '마약청정국'이라는 말은 옛말이다. SNS, 텔레그램 등을 통한 주문, 비대면 배송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마약을 사고 판다. 최근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선 '마약음료' 사건까지 발생했다.

그만큼 마약이 일상에서 흔해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마약과의 전쟁 선포를 비롯하더라도 하듯 지금도 텔레그램 등에는 마약 판매 광고가 올라와 있다.

무엇보다 10~20대 등 젊은 층의 마약 투약이 늘고 있다는 게 문제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7년 전체 마약사범 1만3906명 중 10대 마약사범은 119명에 그쳤다. 그러나 2021년 450명, 2022년 454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2017년 2112명이었던 20대 마약사범도 2021년 5077명, 2022년 11월까지 2배 이상 늘어났다.

출처 : 뉴스클레임(<https://www.newsclaim.co.kr>)

## 나.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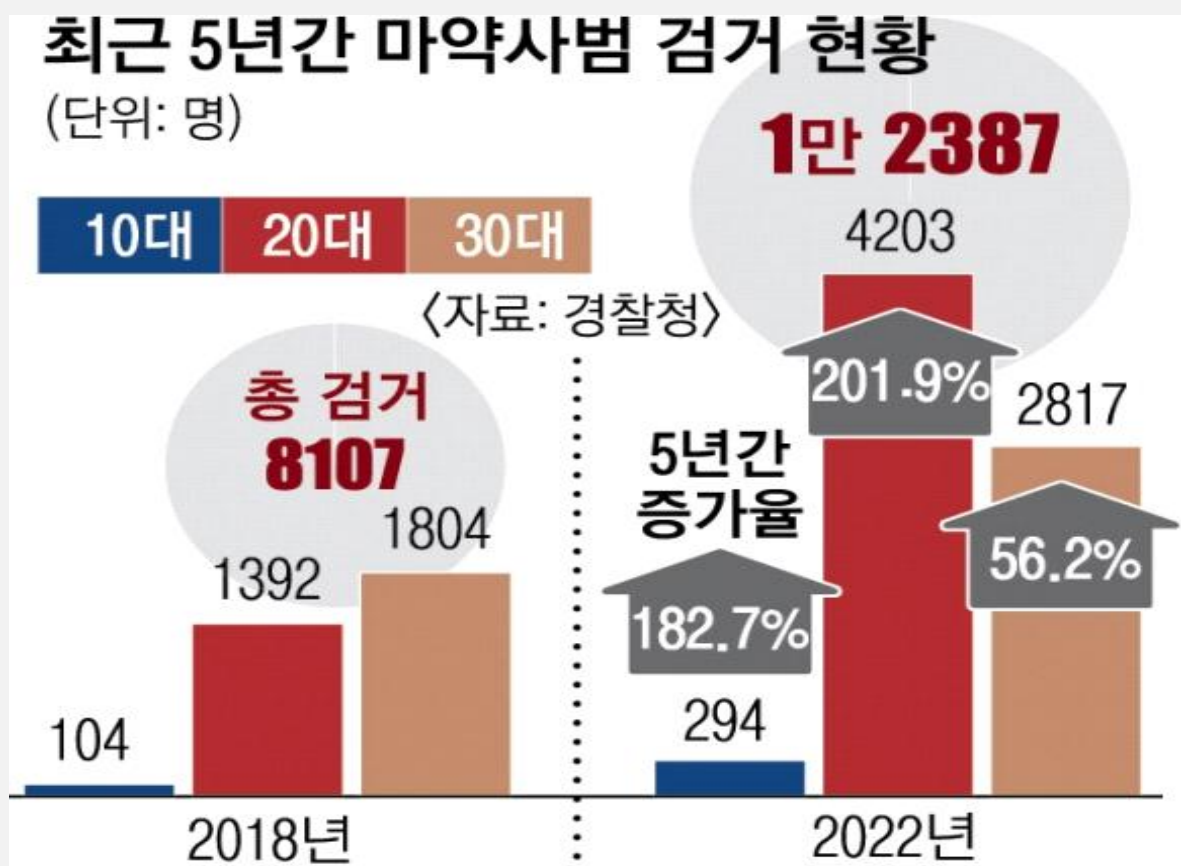
이 조례안은 본칙 8개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문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안 제1조**는 동 제정안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명시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청소년보호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구체화 하는데 적합하며 시민을 대상으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 활동을 통해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 본 조례안의 필요성이 인정됨.
-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마약류”, “유해약물”의 정의를 설명함.
  - 특히, “유해약물”이란 주류, 담배, 흡입제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로 정의하고 있음.
-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시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을 정함.
- **안 제4조**에서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 **안 제5조**에서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추진사업의 대상을 세부적으로 규정함.
  - 특히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하여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전문인력 육성사업을 포함하고 있어 큰 문제는 없음.
- **안 제6조**에는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마약류 및 유해 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 관리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7조**에는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보건소, 경찰서, 보건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함을 규정함.
  - 현재 주관 부서인 보건소 등과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본 제정조례안의 정책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 안 제8조에는 홍보에 관한 사항으로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함을 규정함.

#### 다. 종합검토 의견

- 최근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를 통한 마약 유통이 활성화 되면서 시민의 일상까지 파고들어 마약류에 노출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적극적 예방과 안전 관리가 필요한 시점에서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클럽과 온라인을 통한 마약 판매와 유통이 늘면서 20~30대 마약 사범이 증가함. 2018년 1392명이었던 20대 마약 사범은 지난해 4203명으로 3배 넘게 늘었고 30대 마약 사범도 같은 기간 1804명에서 2817명으로 56.2% 증가했음. 전체 마약 사범이 같은 기간 52.8%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10대와 20대 마약 사범이 유독 많이 늘었음.

- 또한, 본 제정조례안은 마약류뿐만 아니라 주류, 담배, 흡입제 등의 약물까지 총체적으로 사업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조례에 나열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시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됨.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약류의 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관계법령 발췌서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마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연구·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민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 치료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 청소년보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자·통신기술 및 의약품 등의 발달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들 매체물과 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사업의 지원, 국가 간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유해환경 감시·고발 활동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민간의 건의사항을 관련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을 규제할 때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